



가축전염병 낙장 신고시 농가 사육시설 '폐쇄'

- 오는 6월 27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방법개정법률' 시행

오는 6월 27일부터 전염병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가축거래기록 및 가축이동시 검사증명서 등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종축장 등을 추가하여 소독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 지급기로 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04년 축발기금 운용규모 10,907억원 계획

- 농림부, 금년 8,707억원보다 25.3% 증가

최근 농림부는 2004년도 축산발전기금 예산을 금년 대비 25.3%(2,199억원) 증가한

10,907억원을 마련하는 등 2004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내년 축발기금 운용과 관련해 "차별화된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마련,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및 시장기능 강화, 친환경 축산업 기반구축 적극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축발기금 세부사업 운용규모를 보면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26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에 598억원, 축산물 유통개선에 5,477억원, 사육기반확충에 1,739억원 등 총 10,907억원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경영·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용될 계획이다.

내년 축발기금 용자금리 3~4% 인하될 듯

내년부터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지원금리가 3~4% 인하될 것으로 보여 축산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는 '2004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 및 축산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축산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지원금리를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연계 추진하여 3~4%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발기금 용자금리는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규격축산물출하촉진, 가축계열화 등 농어업인·생산자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4%에서 3%로,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사료사업지원 등 축산물유통업체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5~5.5%에서 4%로 각각 인하될 계획이다.

개별농가 부채실태 따라 상환기간·금리 차별화

앞으로 농가별 부채실태 등 개별 농가 단위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부채 경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업인들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의 내용으로 부채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림부는 농가부채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별 부채실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농가 단위 맞춤형 부채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기존 적용방식과는 달리 개별농가의 부채실태에 따라 상환기간과 금리인하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미 영농규모 및 영농형태별 부채실태, 상환능력, 개인채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농가부채 실태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실태결과에 따라 대상 농가를 그룹별로 설정하여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금년 중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추진

- 농림부, '참여정부 농정 100일의 성과와 과제'에서 밝혀

앞으로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6월 4일 '참여정부 농정 100일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농업인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구성된 부채대책위원회와 부채대책 실무기획단을 6월 초 집중 가동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주제별 논의를 가속화하여 부채경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농특위, 청와대 농어촌대책 T/F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키로 하는 한편,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의원입법 계류중인 '부채경감특별법'이 금년 중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협,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기 시행

농협은 지난 6월 4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연기를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나 지역본부 등에 설치돼 있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환연기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환연기를 신청하려면 농협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5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출취급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축산분뇨 저장소 설치비용 지원 추진

그동안 소규모 개별 축산농가가 직접 부담해 왔던 축산분뇨 저장소 설치비용이 정부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축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축분수거, 운반, 퇴비유통, 정화처리 등에 관한 분야별 역할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부터 1,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축산분뇨 저장소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돼지 700두, 소 70두 가량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 저장소 설치 재원을 축산발전기금이나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법인도 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 가능

- 돈사 1천㎡에서 500㎡ 이상으로 신청자격 완화

앞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영하는 일반 법인도 외국인농업연수생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

정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연수대상업체를 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농업을 경영하는 일반 법인도 외국인연수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정대상을 확대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의 요청과 영농현실을 감안하여 대상 영농규모도 양돈의 경우 1천㎡이상에서 5백㎡이상, 젓소 1천4백㎡이상에서 7백㎡이상 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기로 했다.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관련 공청회' 개최

- 6월 25일 농협 서울지역 본부에서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6월 25일 농협 서울지역 본부에서 '축산업등록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본회 등 생산자단체 추천 인사와 농림부 최형규 축산정책과장, 건국대 정찬길 교수, 서울대 박봉균 교수, 축산기술연구소 정진국 과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과 이사 등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제발표와 지정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농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업등록제의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양돈 8월호, 주간양돈정보 6월 30일자 게재>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만 공 급하자”

-전남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학교급식조례 제정 전남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4만9,549명의 서명의 받아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를 도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행정자치부와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례제정의 적정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심의·검토의견이 첨부된 조례안을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상정하게 됨에 따라 추후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나주와 목포 등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한농연 경남도연합회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중독, 학교급식서 매년 급증... 급식법 개정 시급

- 2001년 식중독의 74.1% 학교급식이 차지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우리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농어촌연구소가 출간한 ‘농업은 문화입니다, 생명입니다’라는 책자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2000년에는 7천명으로 96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비중은 96년 19.4%, 2000년 65.9%, 2001년 74.1%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소비구축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가부채규모 31년만에 감소

- 2002년 19,898천원으로 전년 대비 2.3% 줄어

197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농가부채규모가 3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5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농가부채는 가구당 19,898천원으로 전년 말 20,376에 비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자금(-1.7%), 채무상환용 자금 차입금(-10.9%) 및 가계성자금(-2.5%)이 공히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농지, 시설물 등 생산시설투자의 부채가 9.4%(871천원)로 큰 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24,475천원으로 농업소득 0.1%, 농외소득 4% 등의 증가로 전년 23,907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8,677천원으로 농업노임, 임차료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양축비, 농업용이자 등이 각각 17.5%, 4.5% 감소함에 따라 전년 8,927천원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특작농가가 33,29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축산농가가 31,512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농가자산은 축산농가가 226,577천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채비율은 30,294로 높게 나타났다.

양돈농가 평균 부채 농업중 가장 많은 2억7천여만원

- 청원군의회, 농가부채 관련 설문조사 결과서

충북 청원군내 농업경영인 중 양돈농가의 부채가 2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군 의회가 지난달 12일~16일까지 군내 농업경영인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가부채 해결방안'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원군 농업경영인 평균 부채는 8,892만원으로 이중 양돈농가가 2억7,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농가 1억1,787만원, 양봉농가 1억1,500만원, 낙농가 1억88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농가부채 상환에 대해서는 65.8%인 334명이 '농·축협 재대출, 대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향후 소득으로 미뤄 부채상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7.3%인 291명이 '일부는 가능하나 전체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검역원, 향생 잔류물질 위반 50농가 적발

올해 식육 중 잔류물질 위반농가가 5월 21일 현재 50농가가 적발됐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이 향후 축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이 같이 나

타났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26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젓소 13농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농가, 제주도가 12농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속 잔류물질위반농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부,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고시

오는 7월 1일 이후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연속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기로 하는 등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고시했다.

개정에 따르면, 축산물 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하고, 잔류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지도토록 했다.

또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규제검사결과 3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식육중잔류물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에 후보돈 가축입식자금 지원

- 농림부, 두당 36만원 지원키로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지역내 후보돈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도 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지난 5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돼지콜레라 발생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 당한 농가 중 입식농가의 경우 돼지 재입식이 후보돈 및 자축을 입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지원 대상축을 현실화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돈 두당 3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에 대한 농가 지원을 지정도축장 출하 개시일로부터 10일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한 돼지 중 과체중 돼지에 한 하였으나, 동일지역에서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으로 이동제한 될 경우 재 출하 개시일로부터 10일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한 돼지도 포함키로 했다.

7월 1일부터 전국 도축장 HACCP 의무 시행

최근 농림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도축·도계장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 HACCP 의무적용에 따라 미적용 도축·도계장은 오는 7월부터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1

백만원, 영업정지 1~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HACCP 실시를 위해 운용기준 마련을 준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에 앞서 경고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가해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도축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HACCP적용 도축장으로 출하토록 권고했다.

6월27일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벌칙강화

- 위반사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오는 6월 27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6월 27일 이후부터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손상·변경 또는 위장·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하여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된다.

국내산 돼지고기 필리핀 수출 재개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필리핀 수출이 재개 될 것으로 보여 양돈농가를 비롯, 유통업체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필리핀 농업부가 지난해 경기 안성, 평택 등 우리 나라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그동안 취했었던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5월 27일자로 전면 해제하였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는 각 기관 및 축산단체에 대필리핀 돼지고기 수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검역원에 필리핀측에서 승인한 작업장 37개소(도축장 10곳, 가공장 27곳)에 대하여 대필리핀 수출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 검역을 실시하도록 시달렸다.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

- 농림부, '영국산돼지및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안' 제정 입안예고

2001년 구제역이 발생했던 영국산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 국내 수입위생조건이 강화되어 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9일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와 유해잔류물질관리 등을 위해 '영국산돼지및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안' 제정을 입안예고 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방역본부, 6월 27일부터 특수법인 전환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 위해 새롭게 출범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가 오는 6월 27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

었다.

현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방역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6월 27일부터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PED 발생두수 큰 폭 증가

-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9,113두

연중 양돈농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가축전염병 발생월보에 따르면, 4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두수는 2,110두로 전월 1,682두에 비해 25.5%, 전년 동월 1,553두에 비해 35.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 들어 4월까지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총 53농가 16,049두로 전년 동기 누계 27농가 6,936두에 비해 두 배 이상인 9,113두가 증가했다.

미생물로 퇴비 등 악취 90% 제거 기술 개발

퇴비나 축사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를 미생물로 없애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최근 순천대 홍지형 교수는 축사나 퇴비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를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축분퇴비 바이오필터'를 개발했다.

축분퇴비가 필터 내부에 들어있는 바이오필터는 악취의 주범인 암모니아 가스를 필터의 미세한 공극에 의해 퇴비에 흡착되어 고체

로 변하게 한 다음 퇴비 필터 속의 호기성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여 냄새를 없애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취급 또한 간편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에 김창섭씨



농림부는 지난달 26일자로 김창섭 서기관을 가축방역과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신임 김 과장은 52년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 수의학과를 나와 79년 11월 국립동물검역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줄곧 해왔으며, 방역과 검역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행정력까지 겸비한 수의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돈육수입 업체, 제주산 돈육 조기 수입 허용 요청

제주산 돼지고기가 곧 수출될 것으로 보여 지역 양돈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2일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업체인 (주)다카오, (주)청천산업 등 4개 업체가 제주산 돼지고기 조기 수입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입했었던 이들 업체는 제주지사 앞으로 '제주도 돈육 수출 재개 건' 요망서를 보내 빠른 시일내 제주산 돼지고기가 수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003년도 양돈 전문 기술교육' 개최

지난 20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양돈연수원이 위탁 주관하는 '2003년도 양돈 전문 기술교육'이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청룡회관에서 성황속에 개최했다.

김포 관내 본회 회원농가 등 양돈농가를 비롯, 공동방역단 자원봉사업체, 관계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한국양돈연구회, '신기술 양돈 워크숍' 개최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이승준)는 최신의 해외 양돈기술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제5회 신기술 양돈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회가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은 7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호암 컨벤션센터 목련홀에서 '고품질 위생 돈육 생산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 접수 및 문의 : (02)579-5042

한국양돈연구회 사무실 이전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이승준)가 5월 21일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3-4 (대상하우스 202호)

■전화 : 02-579-5042

■팩스 : 02-579-5043 **양돈**

